

## 대학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 역할 이해\*

염 민 호(전남대학교 교수)\*\*

###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현황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다른 하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주요 대학의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방법에 속하는 반구조화 면담기법을 활용했다. 면담은 주요 대학의 보직자 13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결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현황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에서 확인한 공통 주제는 '취업'이었으나, 신입생 충원, 교수 연구역량, 대학원 진학에 대한 인식은 보직자가 속한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달랐다. 지역혁신과 지방대학 역할에 대한 보직자 인식은 다층적이고 복잡했는데, 크게 여덟 가지 주제로 압축할 수 있다: '혁신개념에 생존과 실질변화 강조', '산학협력에 치우친 지역혁신', '사회적 가치와 맥락도 중시', '내밀한 지역사회 문제', '지방대학 역할에 대립된 태도', '지자체-대학 연계는 지역특성 기반 교류협력 강조', '대학주도의 연계협력과 지자체 역할확대', '대학혁신은 교육과정과 교수업적평가에 초점' 등이다. 논의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의미를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눠 제시했다. 첫째,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접근을 전제해야 하며, 지역혁신의 개념화 작업에서는 경제적 관점의 산학협력과 정치적 측면의 민주주의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혁신의 주체로 대학의 주도권을 존중하되 지방정부가 지방대학의 운영과 재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대학 내부의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에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역할을 제도 개혁과 의식개혁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 혁신, 지역혁신,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역할

\* 이 논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0)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이 논문은 2020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교육  
행정학회2)에서 발표되었다. 심사과정에서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중한 피  
드백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minho@jnu.ac.kr)

■ 접수일(2020.08.27), 심사일(2020.09.14), 게재확정일(2020.10.10)

## I. 서론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주제는 ‘산학협력’이지만(김대중, 2018; 김동철, 김정원, 2015; 김정희, 2013; 류장수, 2012, 변기용, 이석열, 변수연, 송경오, 서경화, 2017; 안영진, 2015, 2017 참조), 대학의 역할변화를 보면,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염민호, 2018; 장수명, 남기곤, 2019; 최태진, 2019; Douglass, 2017; Tilak, 2016; Yeom, 2016 참조). 정부가 주도하는 산학협력은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인력양성과 기술 개발/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최태진, 2019). 과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2004-2008)’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2012-2017)’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의 대학정책이 ‘경제적 생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은 대학이 지역사회<sup>1)</sup>의 경제성장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이 전제는 대학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사업/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는, 한편에서 보면 그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있지만, 대학의 전통적 역할을 바꾸고 있으며, 대학은 그 역할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의 지역혁신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보면, 기존 산학협력 중심의 지방대학 역할을 전방위로 확장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협력대상은 기존의 기업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었고, 협력분야는 기존 공학계열에 인문, 사회, 예술 분야를 포함했다. 참여 대상도 기존의 학부중심에서 대학원으로 확대했다(최태진, 2019). 구체적 사업으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2017 ~)’을 들 수 있는데, LINC+는 과거 산학협력과 비교하여 협력대상, 협력분야, 사업 참여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20, 1. 20)’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혁신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의 역할확대가 기대된다(교육부, 2020). 왜냐하면, 이 사업은 각 지역단위에서 구축한 ‘협업 플랫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이 사업발굴과 실행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학의 역할은 각 대학이 지닌 교육역량과 연구역량 그리고 사회공헌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변화된 지방대학 정책과 대학의 참여형태를 보면,

1)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또는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 시민사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대학은 다른 조직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사회 조직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은 나름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표적 역할은 지식생산을 위한 ‘연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공동체 기여를 강조하는 ‘사회공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의 역할은 각 대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변화맥락 그리고 지역혁신에 대한 시각과 접근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역혁신 관련 사업내용의 구성과 방법 활용에 있어 대학은 더 개방적이고 더 도전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 중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론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접근이다. 두 가지 접근은 지자체-대학 간 연계협력 방안모색에 기반이 된다. 먼저, 이론적 접근(염민호, 2018; Altbach, 1999; Douglass, 2017; Tilak, 2016 참조)은 주로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규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전반기 들어 확인되는 대학의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는 대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론적 접근은 이 연구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학정책을 위한 배경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 접근은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구체적인 역할사례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적용의 일반화는 별도의 관심을 요구한다. 구체적 역할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특별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국외 대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김지은, 2010; 송완범, 신근영, 장혜진, 이상규, 2018; 안영진, 2018; 장후은, 이종호, 2017; 장후은, 이종호, 허선영, 2015). 국내 사례 보고(고경호, 2017; 김동철, 김정원, 2015; 김성하, 최성환, 이은정, 황선아, 2015; 안영진, 2015, 2017)는 해당 대학과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특성은 경험적 접근의 이해와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특성이 다르고, 지역사회에 속한 다른 조직과 대학이라는 조직의 목적과 작동방식도 다르며,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방대학 간의 관계 및 역할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수행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연구문제가 국가적 수준과 지역/단위대학 수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적 수준의 연구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된 지방대학정책[대학체제(민철구, 박기범, 정기철, 조현대, 2011), 재정지원(김정희, 2013; 변기용 외, 2017a; 변기용, 이석열, 라은종, 2017b), 지역인재(류장수, 2015), 산학협력(김대중, 2018)]을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의 성과는 국가수준의 거시적 측면에서 관련정책의 개념화 작업, 성과분석을 통한 비판적 검토, 정책개선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대학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문제는 주로 특정대학의 산학협력 사례(김동철, 김정원, 2015; 안영진, 2015, 2017)와 지방정부의 역할(김중성, 2019) 및 지방대학의 역할(염민호, 2018; 윤현석, 2020)을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특정지역 및 단위대학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자체/대학의 역할을 실증분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언급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굳이 찾자면, 지역혁신과 지방대학

의 역할을 거시적/제도적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지역과 특정정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크게 문헌분석과 경험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헌분석은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관련 정책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 경험분석(통계분석과 면담)은 특정정책(산학협력, 재정지원)의 효과분석과 관계자 인식의 이해, 그리고 특정 대학의 사례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 종합하면,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거시적 차원에서 기대하는 지역혁신 및 지방대학의 역할과 지방대학의 실질적 기여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지방대학 보직자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지역혁신 및 대학역할과 관련하여 핵심 이해당사자에 속하는 대학 보직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맥락, 현실적 문제/대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대학의 보직자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고 대학 내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이해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지역혁신 및 대학정책(입안/실행/평가)을 위한 방향과 내용구성에 실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방대학 보직자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현황과 그에 대한 보직자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은 어떠한가.

## II. 핵심 용어의 개념화와 선행 연구의 검토

### 1. 핵심 용어의 개념화

이 연구를 지탱하는 핵심용어는 지역(地域, local/region), 혁신(革新, innovation), 지역사회혁신/지역혁신(地域社會革新/地域革新, local/regional community innovation),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地方自治團體/地方政府, local governments), 대학(大學, universities), 지방대학(地方大學, local/regional universities)이다. 이들 용어 중 지방정부(또는 지자체)와 대학은 그 의미 이해와 활용이 다른 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이유는 법률적으로 두 용어에 대한 개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지자체와 대학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규정에 사용자들 간 최소한의 합의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그 종류, 성격, 기능 등이 명료하게 규정되고 있고(지방자치법, 2015), ‘대학’이라는 용어 또한 ‘고등교육법’에 그 종류, 설립, 운영, 교직원 임무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등교육법, 2019). 그러나 두 용어 외의 다른 핵심용어인 지역, 혁신, 지역혁신은 관련 법률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있다고 해도(예: 지방대학) 그 개념과 의미의 활용에 있어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핵심용어들은 사용하는 사람과 기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각 용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특정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이 연구의 핵심용어들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용어가 지닌 복잡하면서도 난해한 의미를 가능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를 시도한다.

#### 가. ‘지역, 혁신, 지역혁신’의 개념화

첫째, ‘지역’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다. 지리학과 사회학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의 개념에는 공간적 범위와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산맥과 하천에 의해 구분되는 자연환경 기반의 장소에 근거하여 인문/사회 환경의 기준인 언어와 문화 등에 따라 그 지역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역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방(地方)이라는 용어와 구별되지 않고 한데 섞어서 쓰인다. 지역과 지방이라는 두 용어는 ‘지방자치제도’라는 정치체제와 관련 법적용어가 존재하고 각종 (비)공식 문건과 대화상황에서 혼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들 간의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역은 또한 ‘중앙정부’와 대비하여 ‘지방정부’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영역을 공간적으로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지역은 호남권 중 ‘광주전남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의 다른 표현인 ‘지방’의 구체적 용법을 보면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먼저, ‘지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을 뜻한다. 또한 ‘지방’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달리 해석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차별, 폄하,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이라는 용어가 지닌 부정적 의미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사회의 지역 차별 극복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류장수, 2019 참조). 이 연구에서 ‘지역’의 개념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소외받고 차별받으며 무시당했던 ‘지방’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 해석도 당사자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상실감과 박탈감이 내면화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강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민

들은 자가발전 및 자긍심 확인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드물다. 대부분의 지역 발전논리가 중앙정부의 지역 차별정책에 따랐기 때문이다(염민호, 2018: 393). 그러나 이런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지역민들의 역사의식은 높고, 정치의식도 매우 강하다. 예를 들어, 호남지역 사람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세대를 통한 역사적 체험에 근거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현대사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 불의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지역과 국가차원의 민주주의 발전에 주체로 참여하여 희생한 역사적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지역/지방이라는 용어의 개념화에는 해당지역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요인을 고려해야 그 용어의 개념과 이해에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다. 혁신은 이 연구에서 핵심조직으로 규정된 ‘지자체’와 ‘지방대학’간의 연계협력 역할을 규정하고 이끌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어다. 혁신이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를 넓게 규정하면 개인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낡은 풍습, 관습, 사고방식, 문제해결방법, 조직운영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박선형, 2020: 30-32 참조). ‘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맥락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되기에 명료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현재 ‘혁신’은 세계적 유행어가 되어 있는데, 개인의 의식변화부터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의미로 여러 영역(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정치학)에서 사용자가 이해하고 규정한 맥락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 혁신이라는 용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야는 공학에서의 ‘기술혁신’을 들 수 있으며, 조직에서는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경영혁신’이라는 용어를 활용한다. 이들 영역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종합하면, 혁신은 현대적 의미로 “개인과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생각과 창조적 접근을 요구하며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행위(Wikipedia, 2019)”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따르면, 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화에는 그 의미의 포괄성, 다양성, 적용성 등을 폭넓게 수용해야 용어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의 개념화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혁신은 ‘지역사회 혁신’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특정의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체단체의 행정행위 범위 내에서 산업, 생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은 가정, 지방정부, (대)학교, 산업체,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는 이들 조직과 조직에 속한 개인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삶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혁신’에 대한 논의는 집단으로서 각 조직에 적용 가능한 특정의 경험중심 접근이 그 논의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혁신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접근도 그들이 처한 입장

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전략구성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방안구축도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대학은 그가 가진 교육역량과 연구역량 그리고 사회공헌역량에 맞춰 지방정부, 산업체, 시민사회와 관계를 맺고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 같다. 종합하면, 지역혁신은 특정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여러 부문을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지역사회와 주민 개인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치, 목표, 방법을 포함하는 용어다.

#### 나. '지방대학'의 개념화

한국에서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용어 그 자체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전에 근거하여 문자 그 자체의 의미를 규정하면,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는 한국에서 각 지방(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지방대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이든 간에 각 지방/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지방대학'이다.<sup>2)</sup> 그러나 한국에서 '지방대학'의 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용어의 적용에는 한국사회가 지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 이미지는 '낮은 서열', '차별', '소외', '무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서 방점은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 앞서 '지역'이라는 용어의 개념화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지방'은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제정)'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위치로는 비수도권에 있으나, 비수도권이 지닌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차별, 소외, 무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된 "근본적이고 구조적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구조화,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류장수, 2019: 179). 종합하면, 한국에서 '지방대학'이라는 용어 그 자체의 개념은 '특정 지역 안에 위치한 대학(지역 소재 대학)'을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낮은 서열의 대학'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 구조적 특성인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과 학령인구의 절대 감소로 지방대학은 존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방대학의 변화 발전을 기대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와 투자만큼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 '지방대'는 '지역 소재 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유는 지방대학 관계자들이 이류, 삼류라는 의미로 바뀌어 버린 '지방대' 사용에 대한 반대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이다(류장수, 2019: 171-172).

## 2.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제구성(연구문제)의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과 관련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대학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다. 마지막은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의 연계협력 사례에 관한 연구다. 선행연구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크게 문헌연구와 경험연구(통계분석, 사례분석)로 나눌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국내 선행연구 검토 결과, 먼저 주제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관련 연구의 특징은 지방과 지방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요 정책의 성과를 실증 분석했다는 것이다. 지방이 직면한 문제규명에 관한 연구 중 지역인재의 유출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류장수(2015)의 논문은 유출자들(고교졸업자, 지방대학 졸업자)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제인식과 실천대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확인된 공통점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강조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및 방식의 전환이다(김정희, 2013; 민철구 외, 2011; 변기용 외, 2017a, 2017b; 신현석, 반상진, 변기용, 이은구, 주휘정, 2011).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중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연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대중, 2018; 류장수, 2012; 류장수, 조장식, 2018)의 공통점은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지닌 특징은 산학협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동철, 김정원(2015)의 논문은 강원대학교의 LINC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거점대학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어떻게 완화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주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영진(2015, 2017)의 연구는 전남대학교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데, 대학의 지식과 기술이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2015) 대학에서 창출한 기술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학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의 질적 차이가 광주전남지역과 수도권 간에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그는 후속연구(2017)에서 구체적 사례로 연구계약 건수/금액 분포를 분석했는데,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이 소재한 대전(46.3%/41.0%)과 서울(12.9%/12.9%)에 치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염민호(2018)의 연구는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발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하면서 발전개념을 기존의 크기, 양, 속도, 수치 중심에서 개인의 권리, 복지, 참여, 지속 가능성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호남권 실상 분석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에 대한 연구는 앞의 두 주제와 비교하여 양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시기적으로 최근에 수행된 것이다. 고경호(2017)는 충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과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지역단위의 산학 간 기술이전촉진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성(2019)은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제도, 지원방식, 행정, 재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연계협력에 대한 최근 논의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이 2020년 1월 22일 주관한 ‘경영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전남대학교 경영대학, 2020). 이날 세미나 중 특별한 내용은 윤현석(2020)의 발표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최근 5년간(2015-2019)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발전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경영대학은 “다른 대학,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나 연계를 위한 활동은 없었으며, 지역 문제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등도 찾아 볼 수 없었다.”(p. 4). 뿐만 아니라 2018년-2019년 사이에 개최한 14차례 학술집담회 발표주제 중 지역관련 주제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sup>3)</sup>

기존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을 보면, 주제에 따라 채택하는 연구방법이 달라진다. 중앙정부의 지방대학정책 관련 연구는 대부분 문헌분석(김정희, 2013; 민철구 외, 2011; 신현석 외, 2011)을 취하고 있는 반면, 실증분석을 취하는 연구(김대중, 2018; 류장수, 2012, 2015; 변기용 외, 2017a, 2017b)는 지역의 실태분석, 특정사업의 효과 분석,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인식이해에 도움이 된다. 지방대학의 역할사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김동철, 김정원, 2015; 안영진, 2015, 2017)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염민호(2018)는 문헌분석과 담론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된 유일한 질적연구(변기용 외, 2017a, 2017b)와 이 연구가 지닌 차이는 연구대상으로 광주 전남지역 소재 주요대학과 그 대학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보직교수를 선정했다는 것이며, 연구문제를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보직자 인식으로 확대했다는 데 있다.

3) 경영대학의 관심은 주로 국가수준/세계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경영대학과의 경쟁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국외 대학들과의 교류 및 협정을 통한 세계 네트워크 구축, 수준 높은 학술 연구 진흥 등에 주력해왔다.”(윤현석, 2020: 4). 그 결과 “지역과의 소통이나 공감이가능한 활동 없이 주로 세계 주요 국가의 대학과의 교류 및 협정 체결에만 치중해와 지역 연관성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윤현석, 2020: 7).

### I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통계자료, 연구보고서)의 분석과 질적 연구방법인 면담을 활용했다. 지방대학과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현황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9)에 공개된 통계자료와 한국연구재단(2009, 2019)에서 발간한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연구자가 연구내용에 맞게 재구성했다. 면담대상의 선정과 면담내용(녹취록)의 분석은 질적 사례연구<sup>4)</sup>에서 존중하는 절차를 따랐다(Gay & Airasian, 2003; Strauss & Corbin, 1998; Yin, 2003 참조).

####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따랐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22개 4년제 대학 중 4개 주요 대학을 선정했다.<sup>5)</sup> 4개 대학을 설립유형으로 구분하면 3개 국립대와 1개 사립대다. 대학 규모로 구분하면 2개 대 규모 대학과 2개 중규모 대학이다. 이들 4개 대학은 광주전남지역에서 4년제 대학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교육/연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각 대학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핵심 보직자를 선정했다. 보직자는 총장/부총장/기획(조정)처장/연구처장/본부장/산학협력단장/(전원직)학장/부속기관장 등으로 현직 교수 신분이다. 보직자를 면담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해당 지역사회 및 대학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직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먼저 전화/이메일/문자를 통해 각 대학 보직자와 접촉했다. 1차 접촉 내용에는 연구 목적/연구문제/면담지침 등을 포함했다. 1차 접촉 대상은 16명이었는데 그 중 12명이 참여 협조를 약속했으며, 1명은 현장방문 도중 우연히 합석하여 면담에 응한 보직자다. 총 면담자는 13명이다(<표 1 참조>).

4) 여기서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의 개념은 “경험연구의 한 분야로서 당대에 노출된 현상과 맥락 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당대 현상이 포함된 실제 생활의 맥락 내에서 당대 현상을 규명”(Yin, 2003: 13)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현상’의 개념을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이 처한 현황/문제/쟁점 등으로 이해했으며, ‘맥락’은 대학보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지역혁신/대학정책/산학협력/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전후사정으로 이해했다. 연구자가 이 연구를 질적 사례연구로 규정한 이유는 당대 핵심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된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이해당사자인 대학보직자가 처한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5) 2020년 현재 광주전남지역 대학현황을 보면 전문대학의 수는 광주 7교, 전남 11교이며, 4년제 대학의 수는 광주 11교, 전남 11교로 구성되어 있다(대학알리미, 2020).

&lt;표 1&gt;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연번	참여자	전공	교육경력(연수)	연구경력(연수)	해외경험	대학 소재지/규모
1	가	이공	8	25	○	대도시/대규모
2	나	사회	28	35	○	대도시/대규모
3	다	이공	21	30	○	소도시/중규모
4	라	이공	20	25	○	소도시/중규모
5	마	이공	33	39	○	소도시/중규모
6	바	사회	20	30	○	대도시/대규모
7	사	이공	22	30	○	대도시/대규모
8	아	이공	22	28	×	소도시/중규모
9	자	인문	30	35	○	소도시/중규모
10	차	사회	25	30	○	대도시/대규모
11	카	이공	21	25	×	대도시/대규모
12	타	사회	18	25	○	대도시/대규모
13	파	이공	29	35	○	대도시/대규모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했으며 동의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에 응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중 11명은 학위과정과 연구년을 통한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 경험 여부를 면담내용에 포함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외 대학의 지역혁신 사례에 대한 정보와 직접 경험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 2. 연구 수행 과정

### 가. 녹취록과 면담 노트

연구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한 후 연구보조자(A)의 협조를 받아 녹음내용을 전사한 녹취록을 작성했다. A는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녹취록 작성의 방법과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A는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대화의 핵심내용을 기록했다. 따라서 녹취록은 면담 대상자와의 대화 중 연구자의 질문에 대응하는 면담 대상자의 발언 중에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된 것이다. 연구자는 또한 면담노트를 활용하여 면담 도중 핵심어를 중심으로 면담 내용을 기록했다. 녹취록과 면담노트는 면담내용의 전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한편, 스마트폰의 녹음장치 활용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녹음이 끊긴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했는데, 연구자가 작성한 면담노트가 끊긴 내용 보완에 도움이 되었다.

## 나. 면담

**<표 2> 반구조화 면담 지침**

범주	면담 내용
지역사회	- 광주/전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대안
지역혁신	- 혁신/지역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사례 - 개인/집단 차원서 경험한 지역혁신의 실제/문제/대안
지방(국립)대학	- 광주/전남지역 소재의 대학의 현실과 문제/대안 - 지방대학의 역할(연구/교육/사회공헌)과 대학혁신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사례	-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내/외 연계협력 사례 - 연계협력 사례의 특성과 성공/실패의 요인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방안	- 연계협력의 주체 구성 - 연계협력의 내용과 방법

면담목적은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대학 보직자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데 있었다. 면담은 2020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이뤄졌다. 면담은 면담 대상자가 결정한 날과 시간 그리고 장소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직접 방문한 후 반구조화 면담기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기법을 활용한 이유는 대학 보직자와의 면담 기회 및 시간 확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면담 소요시간은 각 참여자 당 최소 20분(1명)에서 최대 50분이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한 후, 연구자가 준비한 면담지침(<표 2> 참조)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반영하는 면담지침을 근거로 질문을 주도했고,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답변내용을 보충하거나 확대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는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분석을 위해 면담 녹음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하였다.

## 다. 분석

녹취록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했는데, 전공, 국책사업 참여 경험, 대학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달랐다.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녹취록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했다. 녹취록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 101-161)이 제시한 코딩절차(개방 코딩-축 코딩-선택 코딩), Gay와 Airasian(2003: 227-255)의 질적 연구 자료분석(주제 확인-범주구성-양식 도출), 그리고 이동성, 김영천(2014)의 포괄적 분석절차를 참고한 후,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춰 네 단계로 구성하여 반복 진행했다. 첫째, 반구조화 면담기법이 지닌 이점(시간 절약, 범주 사전 설정, 면담 융통성)을 활용하여, 설정한 범주에 적합한 면담내용을 녹취록에서 (재)확인하고 (재)분류했다. 둘째, 분류된 면담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면

서 (재)확인하고 추출한 공통 용어/개념/사례/맥락을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여러 주제(하위 주제)를 (재)도출했다. 주제 도출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B) 두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하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B는 사회과학계열에 종사하는 박사급 연구자로서 그의 연구에 질적 방법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새롭게 도출된 여덟 가지 주제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 면담내용의 적절성을 (재)확인하고 (재)분류한 후 면담내용(단어, 구절, 문장, 문단)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질적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면담내용 중 확인된 특별한 내용은 공통 내용 또는 공통 요인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분석에 활용했다. 넷째, 연구결과 확인된 여덟 가지 주제가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갖는 의미를 세 가지 대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논의하고, 그 의미가 제도개혁(정책의 입안/실행/평가)과 의식개혁(이해당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녹취록 분석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류된 주제 및 관련 내용들을 연구진 간에 교차 확인하였다.

#### 라. 연구 신뢰성 확보

이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모든 코딩 단계에서 자료 분석과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에 교차 검증했다. 먼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자 B는 연구 자료와 코딩에서의 차이, 실수, 오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록 원본과 연구책임자의 1차 코딩을 검토했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B와의 논의를 통해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를 해결하여 녹취록을 재(분류)했다. 둘째, 연구자가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작성한 간단한 메모노트가 일종의 추적 기록장치의 기능을 했다. 메모노트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과정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검토결과가 연구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담자료 검증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면담 대상자들이 면담 요약본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 요약본을 검토하는 이유는 자신의 발언내용에 대한 사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녹취록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생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연구의 참여자 13인 중 단 2인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1인은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고 이 연구결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전자메일로 공유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녹취록에서 인용된 특정의 정보와 통계수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랐다.

## IV. 연구 결과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맞춰 두 가지로 나눠 제시한다. 첫째는 (광주전남지역)지방대학의 현황과 그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이다. 둘째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주요대학의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다.

### 1. 지방대학의 현황과 보직자의 인식

#### 가. 지방대학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현황 이해

지방대학과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의 현황이해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가능하다. 먼저 현황이해를 위해 활용하는 양적지표는 대학 수, 대학생 수, 입학자 수, 교원 수, 직원 수, 연구비, 논문 편수, 대학원 진학률 등이다. 이들 양적지표는 지난 10년(2009-2019) 동안 수도권/지방/광주전남지역의 대학변화 정도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활용하는 양적지표는 변화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질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양적지표로는 개별 대학과 개별 교수진이 인식하는 지방대학의 고유한 상황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의 현황을 비교하면(<표 3> 참조),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지방대학의 숫자는 늘어난 반면에 지방대학의 재학생 수와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비율은 2009년에 37.4%(수도권) 대 62.6%(지방)이었으나, 2019년에는 36.3%(수도권) 대 63.7%(지방)로 지방대학이 전체 대비 1.1%(11개교)가 늘어났다. 대학생 수는 2009년에 37.7%(수도권) 대 62.3%(지방)이었으나 2019년에는 39.2%(수도권) 대 60.8%(지방)로 지방의 대학생 수가 1.5% 감소했으며, 입학생 수도 2009년에 36.3%(수도권) 대 63.7%(지방)이었으나 2019년에는 38.3%(수도권) 대 61.7%(지방)로 지방이 2% 감소했다. 교원 수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변화가 없으며, 직원 수는 지방이 2.3% 늘었다. 이런 수치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과 수도권 대학 선호가 지속되는 한 지방의 대학생 수와 입학자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이 초래한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고려할 경우, 지방 중에서도 호남권 대학의 학생 수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주요 지표 비교 (09년 대 18/19년)6

구분	2009학년도			2018/2019학년도		
	수도권	지방	계	수도권	지방	계
대학 수	70개교 (37.4%)	117개교 (62.6%)	187개교	73개교 (36.3%)	128개교 (63.7%)	201개교
대학생 수7)	756,479명 (37.7%)	1,250,443명 (62.3%)	2,006,922명	791,270명 (39.2%)	1,226,070명 (60.8%)	2,017,340명
입학자 수	128,235명 (36.3%)	224,749명 (63.7%)	352,984명	132,981명 (38.3%)	214,137명 (61.7%)	347,118명
교원 수	22,091명 (39.9%)	33,232명 (60.1%)	55,323명	26,644명 (39.9%)	40,099명 (60.1%)	66,743명
직원 수	10,988명 (41.5%)	15,484명 (58.5%)	26,472명	18,531명 (39.2%)	28,759명 (60.8%)	47,290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9)>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의 현황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다른 양적지표를 활용하면, 교수진의 연구역량 변화와 학생들의 지방대학 대학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 지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학원 진학률 등이다. 이들 지표 중 교수진의 연구역량과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과 지방대학 대학원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수 1인당 연구비의 경우 수도권 교수가 10년 사이에 9백만 원 증가한 반면, 광주전남지역 교수 1인당 연구비는 같은 기간 동안 2천1백만 원 늘었다. 교수 1인당 논문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이 0.05편 증가한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0.17편 증가하여 그 증가 폭이 3배 이상 높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2009년 42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감소했다. 대학원 진학률은 2009년 4.55%에서 2018년 4.40%로 10년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수도권의 2009년 7.86%와 2018년 7.52%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다. 종합하면 광주전남지역 교수 개인의 연구역량은 신장 추세에 있는 반면, 연구과정을 중시하는 대학원 진학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수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광주전남지역 교수진의 연구역량과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외부 요인을 들면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은 수도권 또는 해외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조사대상(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 국방 및 치안관련 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이다. 2009년부터는 학교설치령이 고등교육법으로 전환된 사립대학도 추가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31).

7) '대학생 수(학생 수)'는 재적학생 수를 의미한다.

&lt;표 4&gt; 수도권, 지방,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주요 지표

구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sup>8)</sup>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 수	기술이전 수익평균	대학원 진학률 <sup>9)</sup>
수도권	09	52.35명	7천 9백만 원	0.93편	4천 2백만 원	7.86%
	18/19	48.25명	8천 8백만 원	0.98편		7.52%
지방	09	44.17명	5천만 원	0.74편	1천 6백만 원	5.58%
	18/19	29.07명	7천 3백만 원	0.83편		5.28%
광주 전남	09	42.02명	5천 6백만 원	0.63편	1천 3백만 원	4.55%
	18/19	33.96명	7천 7백만 원	0.80편		4.40%

<출처: 한국연구재단(2009, 2019).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나. 광주전남지역 대학 현황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

보직자의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현황에 대한 인식은 면담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했다. 세 주제는 앞의 광주전남지역 대학현황 분석(<표 3>과 <표 4> 참조)에 활용한 지표 중 '신입생 충원', '교수진의 연구 역량', '대학원 진학률'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은 대학 소재지의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새로운 주제로 제시한 '취업'은 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핵심 문제였다(면담자 가, 라, 카, 파). '신입생 충원'은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대학 보직자의 주요 관심사로 이들은 '신입생 충원'을 대학 생존과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었다(면담자 아). 반면, 지방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 보직자는 신입생 충원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교수진의 연구 역량'에 대해서도 대도시 소재 대형대학 보직자과 소도시 소재 중형대학 보직자의 인식이 달랐다. <표 4>에 나타난 교수진의 연구비와 논문 수 증가는 연구역량의 신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교수진의 인식은 대학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달랐다. 대형대학 보직자는 대학 교수진의 연구역량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담자 바, 사, 타, 파). 그러나 소도시 소재 중형대학 보직자는 신입생 충원과 같은 대학 생존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했다(면

8) 조사대상 위와 동일, 조사연도 2019

9) 대학원 진학률은 조사기준일(2018.12.31) 당시 국내전문대학, 국내대학, 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 국외대학, 국외대학원 진학자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를 종합하여 계산한 것이다. 2009년은 교육통계서비스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을 '학교소재지별'로 종합하여 계산했다. 2018년은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학교별 취업통계(지역별 진학자)'에서 졸업자와 진학자를 근거로 계산했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09, 2018)).



답자 *아, 자*). 교수진의 연구 관심과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항은 대학 교수진이 지역사회의 현안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개별 교수들이 교원으로서의 성장과정에서 현장기반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면답자 *다*)과 교수업적평가체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답자 *가, 바, 자*)고 지적했다.

앞의 <표 4>에서 확인된 '대학원 진학률 저하'는 교수진의 연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학원생 부족은 교수진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라는 지적(면답자 *다, 바, 타*)이 있었는데, 지역문제해결은 현장기반의 연구 활동으로서 연구수행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면답자 *다, 차*). 한편, 학부 졸업생의 '취업'은 모든 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지방대학의 문제였다. 보직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면답자 *가, 파*). 또한 구직자와 지역산업체 간의 요구 불일치(미스매치)와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한 학생들의 낮은 유지취업률도 취업의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다(면답자 *가, 바, 사, 카, 파*).

요약하면, 지방대학과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의 현황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를 알려준다. 하나는 학생들의 수도권 소재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진학선호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지방의 대학생 수와 입학자 수가 수도권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이다. 양적지표로 확인된 지난 10년 동안의 학생 수와 대학원 진학률의 감소는 미래의 변화추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치다. 다른 하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수의 연구역량이 지난 10년 사이에 신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1인당 연구비와 교수 1인당 논문 수의 증가가 대표적 증거다. 연구비 액수와 논문편수의 증가 폭이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대학평가에서 '연구업적'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교수진 구성에 연구 역량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양적지표를 통한 현황 이해는 보직자와의 면담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내용은 대학원생 진학률 감소와 소도시 대학 교수진의 연구관심과 연구역량 간의 관계다. 양적지표에 따르면 교수진의 연구역량은 높아졌으나 면담내용에 따르면 교수진의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방대학 교수진의 연구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다. 양적으로는 그 수치가 늘어났지만, 그 연구들이 지역문제에 얼마나 연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양적 지표를 통한 현황분석과 면담을 통해 확인된 교수진의 인식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직면한 문제인식도 달라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부분적으

로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지역경제격차, 학령인구감소, 고령화)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사회 혁신에 대한 지방대학의 역할 수행에 복잡하면서도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대학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은 크게 여덟 가지 주제로 나눠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주제는 녹취록 분석결과를 종합한 후 공통적으로 확인된 유형과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한 것이다. 이 주제들은 다음 장(V)인 ‘논의와 결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대주제와 두 가지 대안구성에도 적용되었다. 여덟 가지 주제는 ‘혁신 개념에 생존과 실질 변화 강조’, ‘산학협력에 치우친 지역혁신’, ‘사회적 가치와 맥락도 중시’, ‘내밀한 지역사회 문제’, ‘지방대학 역할에 대립된 태도’, ‘지자체-대학 연계는 지역특성 기반의 교류협력 중시’, ‘대학주도의 연계협력과 지자체 역할 확대’, ‘대학혁신은 교육과정과 교수업적평가에 초점’ 등이다. 연구결과의 진술은 녹취록 분석과정에서 확인한 핵심 어휘, 구절, 문장, 문단을 주제에 맞춰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 가. 혁신 개념에 생존과 실질 변화 강조

(지역)혁신의 개념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은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부정적 접근과 긍정적 접근의 양가적 입장이 보이나, 그 내용을 분석하면 생존과 실질적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보직자는 ‘무관심’(면담자 A), ‘공허한 느낌’(면담자 B), ‘와 닿지 않음’/‘정권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용어’(면담자 C)라고 인식한 반면에, 긍정적 시각을 가진 보직자는 ‘사람의 변화부터’/‘자발적 변화’(면담자 D), ‘미래 생존전략’(면담자 E), ‘총체적·상향적 접근’(면담자 F)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혁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보직자가 속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생존 방식 및 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공허하긴 하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가 아닌 지역혁신이라는 큰 주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오히려 중화시킨다고 할까요. 본인은 공생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니까. (면담자 B)

별로 안 다가왔다. 혁신이라는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전공(경영학)쪽에서 보면 정권

이 바뀔 때마다 캐치 프레이즈 하는 식이다. ...부서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하는. 정부의 관행에 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면담자 *취*)

변화의 의미를 혁신으로 갈아탄 것이라 본다. 여기서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생존을 위해 기존의 상태를 바꾸는 거다. 현재 상태, 구조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생존이 단순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하느냐, 구차하게 생존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나은, 아니면 현상유지, 현상보다 못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다고 생존을 본다. (면담자 *나*)

지역혁신은 총체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보자.”고 뜻이 모이는 과정을 거치는 bottom-up(상향식)이 되어야 한다. (면담자 *타*)

#### 나. 산학협력에 치우친 지역혁신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된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의 보직자들이 지역사회 혁신과 관련된 문제규명 및 해법제시에서 ‘산학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접근에 치우친 이런 인식은 보직자 전공 특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공계열 보직자와 국책사업 참여자들은 지역혁신과 산학협력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면담자 *가, 바, 사, 카, 띠*). 경제적 측면은 주로 경상도 지역과 비교하면서 ‘지역의 산업기반 절대부족’,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좋은 일자리 부족’등을 지적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문제가 크다. 대학에서는 기업체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먹거리가 부족하다. 특히 그 중에서 지역 혁신을 추동할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 지역 기업이 기술, 인력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기술, 홍보 마케팅, 법률적 컨설팅, 인력 등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대구, 부산은 산업기반이, 충청은 행정기반이 탄탄하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 기업(기반)이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다. (면담자 *뽀*)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의도적인 계획 하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연봉, 복지, 교육의 차이를 인식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지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면담자 *사*)

대구나 진주, 구미와 비교했을 때 산업 쪽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취업도 경북대, 경상대에서는 산업기반이나 수요기반이 많기 때문에 취업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으나, 광주, 전남은 지역산업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생 취업문제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면담자 *띠*)

### 다. 사회적 가치와 맥락도 중시: 민주주의와 총체적 접근 강조

소수의 보직자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지역혁신은 광주전남 지역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 경험과 맥락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혁신을 정치적·문화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며, 핵심가치로 '민주주의'를 제시했다(면담자 나, 다, 라, 자, 차, 타). 또한 혁신의 방법에 있어서는 '전방위', '총체적', '다면적' 접근을 중시했다(면담자 카, 타).

광주는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민주주의라는 자산이 있다. 오래전부터 민주화, 구국운동, 반독재 투쟁, 인권도시로 알려져 있으니 이 분야로 특화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이 5·18을 모태로 탄생되었고, 인공지능, 광산업도 민주화의 빛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으므로 첨단산업, 광산업도 지역특화 되어야 한다. (면담자 나)

... 사회·문화적인 이슈를 찾아 지역혁신을 이룰 수도 있다. 여순사건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지역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가져와 협의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면담자 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지리적·자연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혁신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귀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이것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면담자 타)

### 라. 내밀한 지역사회 문제: 엘리트 계층 이기주의, 갈등, 편견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된 보직자들의 지역사회 문제인식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이 중 특이한 용어는 '엘리트 계층의 이기주의'(면담자 나), '편견'(면담자 마, 타), '갈등'(면담자 바) 등이다. 이런 용어들은 대학경영과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내부자들만이 구체적으로 체험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은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의 공동체 자체의 질, 개별적인 인간들의 삶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집단화되고 그룹을 형성할 때 이기주의 형식을 취하고, 파편화되어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 결정, 법적인 판단,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 소위 엘리트 계층에서 두드러진다. 그 저변 소시민들은 그렇지 않고 단결력과 저항력이 강하다. 그들은 특정 큰 이슈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잘 뭉치고 소통도 잘 된다. (면담자 나)

광주와 전남은 별도의 지자체이며 경쟁체제다. 현재의 분권, 지방균형, 이런 차원이면 전남 대학은 광주대학교이다. ...[광주가 광역시로] 독립되어 나갔으면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국립대

학, 거점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남대학교가 광주에서도 지원을 받고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 (면담자 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 사립대학을 바라보는 편견이 심하다. ... 제가 속한 대학의 연구력 지표는 전국에서 15위에 들고 연구력이 떨어지지 않고 교수의 수준 또한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평판도의 경우 지역주민이 저희 대학을 지역 거점 국립대학보다 평가하는 수준은 훨씬 낮다. (면담자 ㄸ)

광주, 전남지역에는 갈등이 너무 많다. 시민단체가 750여 개, 일간신문이 16개 있다. 일간신문이 대구·경북 2개, 부산 2개, 전북 12개 보다 훨씬 많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너무 많아 지역사회 여론 수렴되지 않으며, 의견조율도 어려움이 있다. (면담자 ㄸ)

#### 마.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립된 태도: 역량 부족 대 연구력 충분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립된 태도가 두드러지는 데, 구체적 대상은 대학과 교수진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예를 들어, 소도시 소재한 보직자(면담자 ㄸ)는 대학과 교수진이 지역산업체와 지역사회 요구에 무지하며 대응 능력도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 교수요원들이 현장기반 문제해결의 교육 기회를 받지 못했으며, 대학원생 부족으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소재 보직자(면담자 ㄱ, ㄴ)는 교수들이 지역혁신과 지역특화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도시 소재 국립대 보직자(면담자 ㄹ)는 교수들이 대학생문제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대도시 소재 사회계열 교수(면담자 ㄴ, ㄷ)는 현재 교수업적평가제가 교수들의 지역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회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도시 소재 대규모 대학의 보직자들은(면담자 ㄱ, ㄴ, ㄷ, ㄹ, ㅁ) 대학이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인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연구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여한다고 인식했다.

전남 TP(테크노파크)라든지 실제 기업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대조류에 맞추어 같이 변하고 있는데, 대학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 산업체나 지자체에서 대학에 자문을 구하러 오더라도 대학에서는 그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팔로우업도 잘 못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은 지역 현장 기반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연구, 교육 등으로 현장과 밀착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다른 문제는 대학원생 부족으로 현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담자 ㄸ)

먼저 대학이 지자체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공계 쪽에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으로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교수들은 본인의 연구에만 관심이 있다. 인문 사회계열 쪽에서는 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 갈등, 소통, 의식의 부재 등 지역

의 가치를 재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다. (면담자 *ㅁ*)

교수(채용에) 전반적인 유인체계가 SCI, 국제저널이 훨씬 과중이 높다. 사회과학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연구실적을 위해 관심사가 지역적이거나보다 국제적 경제문제에 가 있다. (면담자 *차*)

인적자원과 연구력은 충분하다. 본 대학에서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오픈캠퍼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픈캠퍼스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면담자 *사*)

지역 국립대는 지자체와의 직접 연계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에 대한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의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지만 인력풀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수요가 없는 분야 즉 교육과정 개혁과 사회변화에는 대응이 느리다는 단점도 있다. (면담자 *카*)

#### 바. 지자체-대학 간 연계는 지역특성 기반의 교류협력 강조

지자체-대학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보직자의 인식은 다른 지역 및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보를 보여줬고, 그 사례들의 성공요인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류협력을 들었다. 반면, 보직자들의 광주전남지역의 연계 사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부분의 보직자(면담자 *가, 나, 다, 라, 바, 사, 타*)는 광주전남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체계적 연계 협력사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각 역할만 중시하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면담자 *라*)와 개별교수 수준에서의 사업추진에 지자체와의 접촉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면담자 *사*)을 들었다. 한편, 각종 국책사업(BK, CK, NURI,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보직자(면담자 *자, 카, 파*)는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경험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이들이 언급한 성공 사례의 특징은 각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면담자 *나*), 지방정부의 적극성과 대학 R&D의 연계(면담자 *카*)였다. 이들이 연계협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재정지원이었다.

지자체에는 기획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손을 잡아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들이 협력하는 사례가 급조해서는 있으나 체계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본다. ... 대구지역의 휴스타 사업이 있다.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경북대와 협의하여 지역 일자리,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부산에는 부산시에 대학의 산학협력단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광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면담자 *가*)

독일을 사례로 들면, 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지자체, 대학, 시민들이 잘 뭉쳐 있다. 또한 이를 관광 사업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바이로이트 대학과 바그너 음악 축제가 공연예술

미디어로 잘 연계되어 있다. 바이로이트 대학은 1876년부터 축제를 시작했다. 그 지역은 바그너 도시라고 해서 다른 어떤 곳도 따라갈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면담자 나)

해외의 사례로 일본 아키타 현립대학이 있다. 이 대학에서는 대학의 역할을 훌륭한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부생들을 석사, 박사과정으로 유도하지 않고 지역기업과 학생들을 연계하는 현장실습을 활발히 하고 있다. (면담자 다)

제주대학의 감귤연구소의 컨셉이나 운영방식이 제주대학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부경대학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옛날 수산대학과 묶여 있어서 수산연구 등이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배도 가지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곳에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피상적으로 접근해 감귤을 예로 들면, 감귤의 종자 생산, 감귤 수출, 감귤을 이용한 화장품, 초콜렛 ...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춘 인력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종말, 관광, 호텔산업 등에 대해서는 제주대가 유명한 대학이 되었다. 이러한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 지역혁신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면담자 E)

#### 사. 대학 주도의 연계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

대학 보직자가 인식하는 지자체-대학 연계협력은 그 주체구성과 추진방법에 있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세 가지 관점은 대학 주도, 지자체 주도, 대학-지자체 협력을 포함한다. 종합하면 분권과 자율에 대한 보직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분권은 중앙정부 및 지역거점대학과의 관계에서, 자율은 대학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먼저, 지자체-대학 연계협력에서 대학의 주도를 주장하는 보직자의 시각은 대학이 지역혁신 관련 사업 특성에 적합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 같다(면담자 다, 마, 바, 사, 아, 자, 차, 타, 파). 이들은 대학에 연계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에서 지자체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이 지역 사회 문제해결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한다. 사업추진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방식'을 주장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하면서 보직을 옮기게 되면 [지역에] 책임감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대학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의 주체로 대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도 힘들고 보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거점국립대가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COC사업 (Center of community)처럼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면담자 바)

대학이 공간적, 문화적, 지식적으로 지자체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는 지역민이 대학으로 찾아오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운영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 내 상생은 지역으로 대학이 찾아가는 형태여야 한다. 5~6년 전부터 지역 내 초·중학교

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학캠프를 했었다. 지자체와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주로 제 재원을 이용했다. 특강비를 모아 재료를 사서 교육을 했다. 저희 같은 지역에는 농촌, 도서지역이 많다. 그런 학생들에게 대학으로서의 교육의 공공성을 제공하려다 보니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경비, 재료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런 시도들이 사그러들지 않나 생각한다. (면담자 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혁신에 방해가 된다. ...상향식 접근 시도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대학협의체'라도 만들어 알아서 할 테니 예산통제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본 교수의 경우 급여 이외에 일정한 연구비 책정이 계속되고 있다. 15년 동안 지급받았다고 한다. 연구를 수주하겠다는 강박이 없어지니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다. 대만, 독일도 [교수당] 평등하게 [예산]을 분배하고 있다. (면담자 타)

다음은 지역혁신의 주체를 지자체로 보는 입장이다(면담자 가, 나). 이들은 그 배경으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지역 내 대학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가능하며, 대학이 지닌 공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대학이 주도하는 대학 간 연계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식 지역혁신 사업에도 부정적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정지원에만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대학을 단합하면 좋을 것 같다. 지자체에는 기획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 대학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특정 분야를 주도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 (면담자 가)

대학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커먼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재산으로서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관리해야 한다. 대학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에 맞는 지식을 생산하여 지역혁신으로 연결해야 한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대학은 사라진다. 일본 같은 경우, 1990년대에 사립대학이 91개였다. 2000년대에는 13개 사립대학을 지자체가 인수를 하여 공립화 했다. 지역공동체의 재산으로서 대학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교육비를 전부 지자체에 주어 그 세금으로 [지역대학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면담자 나)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의 공동 주도를 주장하는 보직자들은(면담자 라, 카) 지방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에 맞춰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지자체는 전략산업의 창구/협력/조정 역할 맡고, 대학은 사업 실행자로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업의 결과가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모든 대학이 그렇다고 본다.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대응자금 분배에 있어서도 사업이 지자체의 전략사업이나 지자체가 추구하는 핵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면담자 라)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을 추진할 경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사업에 적극적인 창구, 협력, 조정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립대의 장점으로 지자체와 직접 연계할 수 있고, 소통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은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추진력이 있고 결과물에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기관과의 적실성이 중요하고, 인력풀의 한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교육과정 개혁으로 현장기반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면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혁신 연계사업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담자 카)

#### 아. 대학혁신은 교육과정과 교수업적평가에 초점

지방대학의 혁신과 관련된 보직자의 인식은 주로 단위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업적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직자들은 지방대학의 본질적 역할 중 하나인 교육 활동 수행에 있어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으로서 교육과정 혁신을 들고 있다(면담자 나, 다, 자, 차, 카, 타, 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교수진의 의식 변화'다(면담자 나, 다, 마, 차, 타, 파). 특히, '교육의 중요성'은 교육 결과가 취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닌 재능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어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소규모 강좌', '글쓰기와 피드백 중시', '사례중심 학습', '문제해결형 수업', '자기주도 학습역량개발'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과의 연계와 참여를 중시하는 비교과 수업의 가치와 효과도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로 '현장실습', '국내외 견학', '기업대표 초청'등을 들었다.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교과목 개혁'은 시대변화와 요구를 고려하는 교수진의 집단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강의하는 과목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신문과 같은 고전적인 과목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한 상황에 맞는 이론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철학과에서 하버마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철학이 현대의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가르친다. 본인의 과목 중에서 26년 전의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학과회의와 같은 집단사고를 통해 과목을 바꾸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스토리텔링 과목도 생겼다. (면담자 나)

기존의 강의 중심교육을 떠나서 지역의 문제해결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PBL 형식). 교수의 역할은 주제를 선택해주고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통해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 형식의 수업을 인문학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다. 학생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의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시도를 늘려가고 있다. (면담자 자)

교육은 학생이 지닌 재능을 발견하여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규모 수업, 글쓰기와 피드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면담자 *타*)

또한 대학혁신의 방법으로서 교수업적평가방식의 개선이 지역혁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면담자 *다, 라, 바, 자, 차, 찌*)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보직자들은 현재 각 대학에서 중시하는 교수업적평가방식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교수진의 관심과 참여를 회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업적평가에서 국제학술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은 교수진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업적 인정의 통로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급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부/대학원생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경우, 특정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하면 해당 지도교수의 그 역할을 책임시수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저희 대학의 경우 낮은 취업률이 문제인데, 융통성 있는 재정 운용을 보장해 준다면 취업촉진단(지역 산업체에 학생들이 방문하여 상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함)을 구성하여 참여한 교수들 및 학생들의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면담자 *라*)

지역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의 한 사례로 RPM(연구기획역량, Research Planning Management)을 들 수 있다. 참여한 교수들에게 한 과목 강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교수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교수가 참석하지만 학점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면담자 *바*)

경제학 전공 교수들의 경우 연구업적을 위해 관심사가 미국에 가 있다. 교육은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수들은 업적을 산정하기 쉬운 연구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연구자가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성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면담자 *차*)

##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의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는데, 하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현황분석과 그에 대한 보직자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다른 하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의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방법에 속하는

반구조화 면담기법을 활용하여 광주전남대학지역의 주요 대학 지도부를 구성하는 보직자 13명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다. 첫째, 광주전남지역 대학현황의 경우, 양적 지표로 확인된 수치의 변화는 지방대학이 처한 열악한 현실(입학생 수 감소, 대학원 진학을 저하)을 보여주고 있으나 교수진의 연구역량은 신장되었다. 면담내용에서 보직자는 열악한 지역경제로 인한 학생취업에 걱정이 많았으며, 지방대학의 현실에 대해서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견해를 드러냈다. 둘째, 대학 보직자들은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재지와 대학규모에 따라 그 인식의 유형과 내용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면담결과 추출한 여덟 가지 주제는 보직자의 인식에 있어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이 지닌 지역적 특수성도 확인해준다.

논의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지닌 의미를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눠 제시한다. 세 가지 주제는 핵심용어의 개념화 작업과 선행연구검토 결과, 그리고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것이다. 첫째, 핵심용어의 개념과 그 의미 이해에 있어 현실 적합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이라는 용어는 포괄성과 다면성 그리고 현실성을 수용해야 그 개념과 의미가 더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의 개념화에 종합적, 다면적,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혁신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접근은 선행연구 검토결과(김대중, 2018; 김정희, 2013; 류장수, 2012, 변기용 외, 2017a; 신현석 외, 2011; 안영진, 2015, 2017)와 면담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학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접근은 지역혁신을 종합적이고 다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자와 교수진들에게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제한 요인이 되었다. 만약, 지역혁신의 개념을 민주주의 가치실현과 사회적·문화적 활동으로 확대하면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범위 및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하고 실질적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대학혁신 관련 정책/사업 수립에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혁신의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학협력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신장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도 해당 지역 및 대학 구성원의 입장에 서야만 그 용어에 포함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방대학에 대한 접근은 '낮은 서열', '차별', '소외', '무시' 등의 부정적 의미로만 접근하면서 그 해결방안 모색도 지방대학을 대상적으로 접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기계적 접근과 재정 투자에만 집착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면담결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학 보직자는 지방대학을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일상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안 모색도 주체적 입장에서 맥락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대학이 지역사회/지방대학의

상황과 맥락에 근거하여 지역혁신과 대학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지닌 의미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 역할의 개념에 대한 대학 보직자의 인식이 해당 지역 및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당사자의 '절박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접근을 전제해야 하고, 당사자의 입장에 서야만 그 의미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혁신의 주체를 대학과 지방정부로 설정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에 머물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큰 틀과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성과평가는 대학과 지역의 맥락에 맞는 접근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그동안 진행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은 지역 상황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있어 현실 적합성이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배제되거나 부수적 역할수행에만 머물렀다(김종성, 2019; 류장수, 2012, 2015 참조).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은 재정운영의 효율성만 강조하거나 지방대학들이 수행한 업적에 근거한 경쟁 유도에만 집착했다(김정희, 2013; 변기용 외, 2017a, 2017b; 신현석 외, 2011 참조).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혁신에 대한 필요를 지방대학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통로와 권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되고 있는 제도개혁은 지방정부가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고 지자체가 자기 판단에 근거한 사업 예산을 대학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대학 내부의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에 따르면, 그동안 규범적 차원 혹은 당위적 차원에서 인정해왔던 지방(국립)대학의 존재와 역할을 반성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교육적 역할에서 지방대학 교수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지방대학이 과연 해당 지역사회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여 배출하는가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의심은 대학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혁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질적 검증을 요구하는데, 특히 학생의 역량신장에 특별한 관심과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수진의 연구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지방대학에서 생산하는 지식과 기술의 실질적 활용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과연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사회의 현안이해와 문제규명 그리고 대안 모색에 어느 정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윤현석, 2020 참조). 이런 맥락에서 대학 교수진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교수업적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수진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개방하고 그 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와 앞의 논의에 근거하여 두 가지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을 증시한 것이다. 제안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으로 나눠 소개한다. 먼저 제도개혁이다. 제도개혁은 지방정부와 대학 차원으로 나눠 진술할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설립, 운영, 재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김중성, 2019 참조). 현재 상황은 지방정부가 대학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으며,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과 보조에만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대학운영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직접 재정 투자를 할 경우, 지역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인의식은 강화될 것이며, 관할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도 더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대학 차원의 제도개혁은 학사운영과 교수업적평가방식의 개혁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런 개혁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육과 연구영역에서 학생과 교수의 일상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그 계기와 노력을 존중하는 데 있다. 학사개혁의 경우, 그 핵심내용은 교수/학생의 수업-학습/연구 활동이 지역사회 혁신활동과 직접 연계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는 정규교과의 운영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독립연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독립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의 규모는 개인과 소집단(3인 이내)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집단구성의 유연성을 존중한다. 교수업적평가방식의 개혁으로는 교수진이 소수 학생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업-학습 활동(예 '독립연구' 또는 '지역사회연구')을 책임시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식개혁이다. 의식개혁은 단위대학 차원에서 특별하게 중시된다. 지역혁신의 개념을 산학협력과 민주주의 신장으로 확대할 경우, 의식개혁은 민주주의 신장에 필요한 다양한 노력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내 각종 조직들이 참여하는 공론장 구성과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검토에서 확인한 바 있는 윤현석(2020)의 접근은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역할이해에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론장의 유형은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집담회, 발표회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의 맥락과 우선순위에 맞춰 자유롭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학 또는 각 조직의 누리집과 SNS를 통해 구성원들과 적시에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론장 활성화와 적극적 홍보는 지역민들과 대학 구성원들이 각 역할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통로가 될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지역혁신은 '조직'으로서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 시민사회가 처한 상황과 그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또는 각 조직이 인식하는 혁신의 목적/내

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혁신과 관련한 지방대학 역할은 지방대학 지도부의 이념과 지도력, 그들이 구성하는 정책(프로그램)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의식과 실천 역량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은 지역혁신에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자일 수도 있으며, 혁신의 장기적 비전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촉매자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학의 역할이 특정 영역과 기능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맥락과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교육역량과 연구역량, 그리고 사회공헌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등교육법(법률 제16742호 일부개정 2019, 12, 10).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899>에서 2020.3 23 인출.
- 고경호. (2017). 지역혁신체제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 충남지역을 사례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 599-610.
- 교육부. (2020. 0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80132>에서 2020. 4. 2 인출.
- 김대중. (2018).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LINC 2단계 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 27-47.
- 김동철, 김정원. (2015). 지역 청년 일자리 mismatch 완화 방안: 강원대학교 LINC 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HRD연구**, 17(2), 215-239.
- 김성하, 최성환, 이은정, 황선아. (2015). 경기도-대학 간 효율적 연계 협력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 2015. 12, 1-254.
- 김정희. (201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육성정책 연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105-135.
- 김종성. (2019).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30(3), 69-91.
- 김지은. (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1(3), 69-86.
- 대학알리미. (2020). 공시대상대학.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50/intro.dod>에서 2020. 5. 5 인출.
- 류장수. (2012).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누리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1), 113-135.
- 류장수. (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1-23.
- 류장수. (2019). **대학과 청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말하는 대학과 청년의 위기와 비전**. 부산: 산지니.
- 류장수, 조장식. (2018).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와 채용 결정요인 연구. **지역사회연구**, 26(4), 45-64.
- 민철구, 박기범, 정기철, 조현대. (2011).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1-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선형. (2020). 혁신의 정의와 발생구조 및 이론체계에 근거한 교육조직혁신 발전방향

-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8(2), 25-58.
- 변기용, 이석열, 변수연, 송경오, 서경화. (2017a).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5(3), 79-108
- 변기용, 이석열, 라은중. (2017b).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5(5), 275-302.
- 송완범, 신근영, 장혜진, 이상규. (2018). **대학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연구-일본 COC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서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 연구원.
-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7091호 일부개정 2020. 03. 24.).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266>에서 2020. 4. 2 인출.
- 신현석, 반상진, 변기용, 이은구, 주휘정. (2011).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18(2), 205-234.
- 안영진. (2015).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한 전남대학교의 사례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190-205.
- 안영진. (2017).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지식이전을 중심으로 한 전남대학교의 사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227-238.
- 안영진. (2018).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독일 대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83-98.
- 염민호. (2018).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교육행정학연구**, 36(5), 385-417.
- 윤현석. (2020).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과 지역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방안. **경영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세미나 자료집** (pp.2-9). 광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 이동성, 김영천. (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 장수명, 남기곤(2019). 한국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제혁신과 정책과제.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의제** (pp.280-329). 서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 장후은, 이종호. (2017).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459-469.
- 장후은, 이종호, 허선영. (2015).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과 지역발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5), 515-526.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2020). **경영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세미나 자료집**. 광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106>에서 2020. 4. 2. 인출
- 지방자치법. (20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066#0000>에서 2020. 4. 2. 인출
- 최태진. (2019. 7. 3). LINC+와 대학 리빙랩.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 및 리빙랩 포럼: 지역사회 속 대학의 역할 전환과 리빙랩. **제15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pp. 2-13).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2019). 교육통계서비스/취업통계시스템.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0.1. 30 인출.
- 한국연구재단. (2009, 2019).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http://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27682dp](http://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27682dp)  
 tj에서 2020. 5.1 인출.
- Altbach, P. (1999). Patterns i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P.G. Altbach, R. O. Berdahl, and P. J. Gumport (Eds.).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15-37).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ouglass, J. A. (2016). *The new flagship university: Changing the paradigm from global ranking to national relevan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ay, L. R., & Airasian, P. (2003). *Educational research: Competencies for analysis and application*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ilak, J. (16 March 2017). *On planning university development: Shillboleths versus stylized facts?* XV Professor Suresh Chandra Shukla Memorial Lecture. Jamia Millia Islamia, New Delhi, India.
- Wikipedia. (2020). *Innovation*. <https://en.wikipedia.org/wiki/Innovation>에서 2020. 3. 15 인출.
- Yeom, M-h. (2016). The rapid growth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chievements, dilemmas, and resolutions, C, Lee, M. N. N., Hawkins, J. N. and Neubauer, D., *The Palgrave Handbook of Asia Pacific Higher Education* (pp.625-640).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BSTRACT

# Understanding Regional Innovation and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 Perceived by University Administrative Professors

Yeom, Minho(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ed at in-depth understanding regional innovation and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 that university administrative professors think. The two research questions include: First,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ies in the Gwangju and Jeonnam-do region, and regarding the status,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professors in the local universities? Second, how do they think about regional innovation and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 By employ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administrative professors working for major universities in the a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mmon theme identified in the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ies in the region was 'employment', but the recognition of the recruitment of new students and other issues differed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university to which the interviewees belong. The perception of the local innovation and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 was multi-layered and complex, and can be broadly summarized into eight themes: emphasizing survival and substantial change on the concept of innovation, local innovation biased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emphasizing social value and context, etc. The author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results in three themes: the sensitivity of using key terms, respecting university's initiative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be involved in local universities, a reflective approach within universities. Finally,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 for regional innovation were specifically presented dividing institutional reforms and consciousness changes.

[Key words]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Local Universities, the Role of Local Universities.